

[신문로] 의사 파업에서 살아남기

2020-09-08 12:43:11 게재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의료 관리학

장면 1. 병원에서 다음주 예정된 체장암 수술이 무기한 연기 되었다고 알려졌다. 72세 A씨는 다시 불안감과 막막함에 휩싸였다. 수술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견뎌왔던 날들. 마음을 다 잡아보지만 기다리는 동안 암이 더 퍼지면 어쩌나 아찔하기만 하다.

장면 2. 이른 새벽 급성심근경색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1시간 넘게 도시를 헤맨다. 의사파업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는 의정부 시내 4곳의 병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18km 떨어진 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지난 몇주 의사 파업으로 환자들이 경험했던 전형적인 의료재난 사례들이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 부족한 의사를 늘려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문제도 해결해보려던 정부여당은 9월 4일, 결국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사협회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하나로 뚝뚝 뭉쳐 의사를 늘리는 데 반대하니 정부라고 버틸 재간이 없었나 보다. 의사협회가 바람을 잡은 파업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선봉에 나서고 대학교수들이 배후에 버티고 서니 가히 천하무적이었다.

앞으로 의사파업 더 자주 경험할 수도

물론 의사들이라고 해서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에 분노했을 것이다. 몇몇 의사는 정부 정책이 '의료개혁'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불모로 한 단체행동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세계의사협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캠페인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파업 중에도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적인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라고 권유한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국가는 파업 2주 전 의무적으로 사전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첫날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인력까지 파업에 참여시켰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성명서에는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환자를 위해 빨리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당부는 없었다. 결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선택한 의사들의 파업 전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공포심과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지만 국민들은 앞으로 의사파업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줄인 데 이어 2020년 다시 정원 증원을 막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파업은 매우 매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의 파업으로부터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 정치인은 아마 이런 공약을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의사협회가 파업을 할 만한 정책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의사를 포함해 시민과 환자, 기업과 노조, 간호사 등 여러 직종의 의료진이 참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정원은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둘째, 의료법을 고쳐 의사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병원의 필수진료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노동 관계법은 업무가 중단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도 전기 같은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병원의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 수술, 투석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국공립병원을 늘리고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 의료진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업을 해도 중증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국공립병원을 통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해야 할 이유 보여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를 늘리자는 정책을 막아선 의사들의 파업은 역설적으로 공공의료체계가 왜 강화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겨 손쉽게 운영해왔고, 그 결과 병원과 의사들은 이제 시장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자와 공공의 이익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하는 공공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